

더민주 당대표 후보들 호남 역할론 강조

추미애 “아들 전주서 낳아”... 김상곤 “전북 일시켜 정권교체가 목표”... 이종걸 “호남없이 정권교체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한 후보들이 저마다 호남 역할론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북도당 정치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연설회’가 지난 13일 전주 오벨리스퀘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오전10시부터 12시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1부 당대표 후보 연설, 최고위원 후보 연설, 2부 더민주 전북도당 경과보고, 김춘진 도당위원장 선출 등으로 마련됐다. 이날 연설에서 추미애·김상곤·이종걸 당 대표 후보들은 호남 특히 전북에 공을 들였다. 더민주 당대표는 오는 27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 추미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만능 리더이며, 아들을 전주에서 낳았다”며 호남 자식임을 강조했다. 추 후보는 또 “김대중 지팡이는 적에게 휘둘리지 않았다. 당대표가 돼 분열을 끝내겠다”면서 “당 대표가 되면 경선은 중앙선관위에 맡길 것이고 공천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 또 관련 선거가 발을 못 붙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곤 후보는 “광주에서 태어나 호남정신을 지키고 살아왔다. 전북 일시켜 정권교체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호남 없이 대선 승리를 못하고,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당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고 20년 집권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선 승리 공식으로 “캠프 중심이 아닌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며 6개월 전 경선을 치러 국정 운영을 미리 논의 생활 중심 정치를 펴야만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종걸 후보는 “원내대표 시절 소수파에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필리버스터 등을 해 오는 등 정권에 맞선 유일한 정치인이다”며 정권교체 선봉장임을 자칭했다. 이 후보는 또 “서민들 세금 무서워 애어컨 틀지 못할 정도인데, 부자는 세금감면

으로 해택주는 나라, 정권교체를 해야하는 필요성이다”라면서 “호남없이 정권교체 불가능하고, 정권교체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선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하며, 친문과 비문 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이종걸이 당 대표 적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당위원장에게 추대된 김춘진 위원장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생활정치로 더민주당이 도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힘을 합해 대선 승리를 만들자”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정진세 의원, 전주시 유도회 감사패

전북도의회 정진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주시 유도회로부터 전북체육활성화와 유도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전주우석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2016 우수팀 초청 전국유도대회장에서 이영섭 전주시유도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정진세 의원은 “유도는 한국 스포츠계의 효자종목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탄생한 꿈나무가 대한민국을 빛내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수많은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해온 선수들이 알찬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신광영 기자



김성식 의원, '남성 출산휴가' 30일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남성의 출산 휴가 기간을 최장 30일까지 사용하도록 의무화 한 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현행 3일에 불과한 유급 출산 휴가를 매달 5일씩 나눠 사용, 6개월 간 30일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에는 ‘사업주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새로 추가됐다. 이를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또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30일의 유급 출산 휴가 급여 가운데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30일분을, 비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15일분을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남성의 자녀 돌봄은 국가나 사업주의 배려가 아닌 부모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 부담에 따른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옥마을을 찾아 전국민생투어 중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 건강관리정책 수립을”

박재만 도의원, “병원비를 100%로 낮춰 외국인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해야”

전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시)은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진료, 점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재만 의원은 “도내 거주 외국인 건강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되어 있고,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9,573명(36%)에 불과하다”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건강관리를 총괄해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산과 남원 지역을 일례로 든 박 의원은 “군산시 2016년 등록 외국인 5,595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472명으로 62%이며 미가입자는 2,123명으로 38%로 나타났다. 또 군산의료원의 경우 2015년 외국인 이용자 1,714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67명으로 21.4%에 불과하고 나머지 78.6%인

1,347명은 미가입자로 나타나 미가입자 이용이 매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또 남원의 경우 등록 외국인이 936명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636명(68%)이고 미가입자는 300명(2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원의료원을 이용한 미가입자는 2015년 기준 10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만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병원비의 10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진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공공성에 기초해 병원비를 100%로 낮춰 외국인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군산지역은 고군산도를 포함

하여 섬지역과 여촌에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여촌계 등과 MOU체결을 통해 진료와 치료접근성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군산의료원의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 등록 외국인은 총 2만 6,333명(남자 1만3,811명(52.5%), 여자 1만 2,522명(47.5%))이며 국적별로 베트남 5,791명(22%), 중국인 5,342명(20.3%), 한국계 중국인 2,525명(9.6%), 캄보디아 2,010명(7.6%), 필리핀 1,357명(5.2%), 네팔 1,313명(4.9%), 우즈베키스탄 1,018명(3.8%)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만6,760명이며 미가입자는 등록 외국인 2만6,333명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1만6,760명(63.6%)을 뺀 9,573명(36.4%)으로 추산된다. /신광영 기자

문재인 “8월15일 건국절 지정 주장 한국 정체성 부정하는 어불성실 주장”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8월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어불성실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헌헌법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고 밝혔다”며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연호표기를 ‘대한민국 30년 9월1일’이라고 했다.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로 공식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실현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국제정세에 관해선 “지금 동북아 정세는 강대국들 간의 힘의 각축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한말의 정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재현 특사... 새누리·국민의당 ‘환영’ vs 더민주 ‘반발’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총재 자택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사면과 관련해서는 통 크게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이나 후보 시절에도 늘 했던 말씀이 법치가 확립되면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법치 확립에 대한 굉장한 확고한 의지를 일관성 있게 지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았나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특사에 이 회장에 포함된 데 대해 “이 회장의 경우는 재벌부주라고 볼 수 없다”라며 “그 분의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고, 영어의 몸이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재벌이라 그 분을 내보냈다고 보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 회장 특별사면은 건강상 문제로 인도적 차원에서 적절하다”며 긍정적인 평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내가 법사위에서도 누차 강조했다. 그렇게 건강이 나쁜 사람이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 환경에선 생명이 위협이 있지 않나”라며 “가석방을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건강이면 인도적 차원에서 (특별사면) 결정을 잘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민주는 반발했다. 송옥주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에서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인에 대한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폭염에 고생하는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이 회장은 지병 악화로 형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지만 복권은 경제인에 대한 온정주의적 사면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약속한 바를 (이회창)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이용호 의원, 폭염 속 민생챙기기 나서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폭염 속 지역 민생챙기기에 여념 없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운봉읍 등 축산 농가 2곳을 방문, 폭염 피해 농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근 남원 축산 농가가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닭, 오리, 돼지 등 가축 16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 특히 비교적 재래가 높은 운봉읍과 인월면까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 의원은 “유례없는 가뭄속더위 속에서 축산업 피해는 거의 재난 수준”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드리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와 잘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남원 보절면 상삼마을 기업형 축사 신축반대현장을 찾아 축사반대대책위 구성원을 비롯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신축될 기업형 축사는 면 중심지에 위치하게 된다. 학교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악취피해, 폐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이영면 포도재배 농가를 비롯 지리산 뱀사골 캠핑장 등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남원 산내면 사무소에서 발전협의회 및 이장단 등과 함께 ‘지리산 신선 자락길 조성방안’ 등 숙원사업을 논의했다. /신광영 기자



정운천 의원, 지역구 민생투어 나서

국회 정운천(새누리당, 전주) 의원이 폭염이 쏟아지는 하한정국 속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민생투어에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 동안 지역구 곳곳을 방문하며 민생을 청취했다. 정 의원은 “당선 이후 행정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그로 인한 성과로 22억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선된 이후 민원해결을 위해 대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있지 않아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며 “총선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의원이 전북에서 당선되면서 새누리당 호남권 전당대회,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등 전북이 호남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탄소배출국회 통과 이후 후속조치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전북탄소밸리’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광영 기자



이정현 “호남득표 20%” 가능성 없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8·9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대선에서) 호남 출신 유권자의 20%를 끌어 올 자신이 있다”며 호남에서의 새누리당 득표를 20% 달성을 요한 바 있다. 이같은 이 대표의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표는 민중화 이후 보수정당에서 탄생한 첫 호남출신 대표이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호남권의 지지를 어느정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영남권 출신 이주영, 주호영 후보보다는 인지도나 접근가능성 등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결국 대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주자가 누구인가를 보고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는 것이지 관리자인 당 대표의 얼굴을 보고 누가 투표를 하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차기 대선에서 여권후보가 누가 될지 여전히 미지수지만 과연 이 대표가 당선됐다고 해서 여권후보가 호남에서 선동적인 인기를 얻거나 엄청난 새누리당 표몰이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다. /뉴시스